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江原日報	01면	'저출생의 늪' 작년 도내 어린이집 70곳 폐원	1
江原日報	27면	“신시장 개척 통해 수출 6,000억원 시대 열겠다”	1
江原日報	19면	“현안 사업 원활 진행 힘 보탬 것”	2
강원도민일보	17면	고성군번영회 신년인사회	2
강원도민일보	21면	"시·군 여성회원 한마음 한 뜻 봉사활동 적극 참여"	3
江原日報	20면	임지혜 통리여성의용소방대장 취임	3
江原日報	온라인	[포토뉴스] 정선군 북평면번영회 신년 인사회	4
江原日報	27면	[동정] 김기홍 강원도의회부의장(원주)	5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김기홍(원쪽) 도의회 부의장·최재민 도의원	5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5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박대현(화천) 도의원	5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하석균 도의회 기획행정위 부위원장	5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도민 100명 중 24명 노인…춘천도 초고령화	6
강원도민일보	02면	'고무줄 청년나이' 정책별로 수혜 대상 들쭉날쭉	6
강원도민일보	04면	'수산물 생산량' 동해 줄고 서해 늘어…지역 격차 심화	7
강원도민일보	05면	도내 거점병원 전문의 줄이탈… "상시채용 불구 충원 난항"	7
江原日報	16면	춘천 호수변 일대 관광자원 키운다	8
江原日報	17면	오늘 원주~여주 복선전철 첫 삽	8
江原日報	20면	태백시-강원랜드 노인요양시설 부지 계약	9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원도심 '지역초교 특성화'로 살린다	9
강원도민일보	10면	"100억원 효과 '원주만두축제' 브랜드화 필요"	10
강원도민일보	11면	강릉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속도낸다	1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청소년올림픽 개최지 물가 관리를	1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외국인 고용제도 합리적 개선을	12
江原日報	25면	[사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경제에 활기 불어넣기를	13
江原日報	25면	[사설]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 5곳, 지역 소멸 전조인가	14

2024 01 12 ()

江原日報

01

‘저출생의 늪’ 작년 도내 어린이집 70곳 폐원

‘민간·가정’ 형에서 속출... 맞벌이 부부·농촌지역 고충 커져
10년 새 3분의 1 급감... 정부 지원 기준 하향·폐지 고민해야

저출생 여파로 강원지역 영유아인구가 급감하면서 어린이집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으며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학부모도 늘고 있다.

11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내 전체 어린이집 수는 835개로 연초 905개에서 70곳이 줄었다. 문을 닫은 곳 중 상당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집 근처 가정 및 민간어린이집

이었다. 실제 지난해 폐원한 70곳 중 가정어린이집(33곳)과 민간어린이집(23곳)이 56개소를 차지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이들 어린이집은 최저 원아 수를 채우지 못해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이 줄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문에 2013년 1,265곳에 달했던 도내 어린이집은 10년 만에 430개가 줄었다.

반면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면서 아이를 낳아도 맡길 곳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신생아가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어린이집 소멸이 곧 지역소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홍천의 한 학부모는 “현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아 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다른 어린이집이 없다”며 “지금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이사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소 총족인원 한도를 더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도내 농촌지역 A법인이어린이집 원장은 “정원은 79명이지만 실제 원아는 12명 안팎까지 줄었다”며 “우리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11명 이하면 지원이 끊기는데 내년에는 아이들이 더 줄어들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원아 수 5명인 B어린이집 원장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교사를 겸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정 원아 수가 4명으로 줄어 폐원을 고려 중”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용래 도의회 교육위원은 “도내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교육위원회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내년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도교육청과 협의해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희기자 yulnyo@kwnews.co.kr

2024 01 12 ()

江原日報

27

“신시장 개척 통해 수출 6,000억원 시대 열겠다”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신년회

지역경제 활성화 신제품 개발 결의

강원의료기기업체가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수출 6,000억원 시대를 열기 위해 의기투합한다.

(사)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는 11일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24 강원의료기기산업 신년회’를 열고 올해 수출 확대를 통한 강원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최길운 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장과 송기현·박정하 국회의원, 권오광 강원자치도경제진흥원장, 최

재민 도의원, 황형주 강원일보 원주본부장, 김광수 (재)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이병철 원주시 경제국장, 허영구 차기 협회장(네오바이오텍 회장)을 비롯해 의료기기업체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업체는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출 5,000억원 달성의 족적을 남겼으며, 올해도 동남아시아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대와 신제품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길운 회장은 “올해 경기



◇2024 강원의료기기산업 신년회가 11일 원주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원주=허영구 기자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 예상되지만, 새로운 열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시장 개척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의원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으로 새로운 도

약이 펼쳐진다. 더 힘을 내자”고 당부했고,

송기현 의원은 “강원 의료기기 대동 2년을 맞아 제품 개발과 공공기관 수요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광수 원장은 “올해는 지

역 내 노후공간 리모델링을 통한 경영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이날 청년 취업진로 및 장기근속 지원 공로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허남윤·김설영기자

江原日報

2024 01 12 ()

19



◇고성군변영회(회장: 한명철)가 주관한 2024년 신년인사회가 11일 금강산콘도에서 이양수 국회의원, 함명준 군수, 이순매 군의회 부의장, 김용복·이지영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현안 사업 원활 진행 힘 보탬 것”

고성군 신년인사회

【고성】갑진년(甲辰年) 새해 고성지역 기관·사회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성 발전을 위한 화합을 다짐했다. 고성군변영회가 주관한 ‘2024년 신년인사회’가 11일 금강산콘도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양수 국회의원과 함명준 고성군수, 이순매 고성군의회 부의장, 이은실 고성경찰서장, 장상훈 고성소방서장, 김용복·이지영 도의원, 김창권 NH농협 고성군지부장, 남기운 고성군노인회장, 주기창 고성문화원장, 김성욱 고성군여협회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동해북부선 철도와 동서고속화 철도,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구간 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명준 군수는 “간성 역세권 투자선도 지구 지정과 함께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권 투자유치 활동 등 그동안의 기반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명철 군변영회장은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천열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12 ()

17



고성군변영회 신년인사회 고성군변영회(회장 한명철) 주관 2024신년인사회가 11일 현내면 금강산콘도에서 함명준 군수를 비롯한 이양수 국회의원, 이순매 군 부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12 ()

21

“시·군 여성회원 한마음 한 뜻 봉사활동 적극 참여”

이경숙 자유총연맹 도여성회장 취임
“조직운영 효율성 추구” 포부 밝혀

이경숙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협의회장이 11일 오후 춘천 자유회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식에는 노용호 국회의원, 임미선 도의원, 김영준 한국자유총연맹 강원특별자치도지부 회장,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협의회 회장, 전금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특보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및 도내 18개 시·군지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행된 취임식에서 이경숙 여성협의회장, 이옥희 여성협의회 수석부회장, 김인혜 여성협의회 부회장, 홍영숙 여성협의회 감사, 송옥희 여성협의회 총무이사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이경숙 여성협의회장은 취임사에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는 여성협의회가 되도록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



강원특별자치도 이경숙 한국자유총연맹 도여성협의회장 취임식이 11일 춘천 자유회관에서 노용호 국회의원, 김영준 강원도지부장, 정영순 전국여성협의회장 등 내빈과 연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유희태

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준 강원특별자치도지부 회장은 격려사에서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시·군 여성회 회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조직 활성화 및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정영순 전국여성협의회장은 축사에서

서 “강원특별자치도지부가 지역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만 하고 지금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노용호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소중한 자유가 깃뚫히지 않고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켜나가는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박재혁

江原日報

2024 01 12 ()

20



임지혜 통리여성의용소방대장 취임 태백소방서(서장: 이재동)는 11일 통리초교에서 이경숙 태백시의회 부의장, 이한영 강원자치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효정 통리여성의용소방대장의 이임식 및 임지혜 대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2024 01 11 ()

江原日報

[포토뉴스] 정선군 북평면번영회 신년 인사회



[포토뉴스] 북평면번영회 신년 인사회



[포토뉴스] 북평면번영회 신년 인사회

2024년 북평면번영회 신년 인사회가 11일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1층 연회장에서 전용표 북평면번영회장, 강선구 정선부군수,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김영덕 정선군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4 01 12 ()

27

◇김기홍강원도의회부의장



(원주)은 12일 오전 10시45분 서원주역 대합실에서 열리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4 01 12 ()

10

참석한다.



김기홍(왼쪽) 도의회 부의장·최재민 도의원은 12일 오전 10시 45분서원주역대합실에서 열리는 여주~원주복선전철 착공식에

강원도민일보

2024 01 12 ()

17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12일 오전 11시 금호동 주

민센터에서 열리는 금호동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12 ()

16



박대현(화천) 도의원은 12일 오후 4시 화천군청

에서 열리는 화천군 교육발전특구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12 ()

10



하석균 도의회 기획행정위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7시 원주 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리는 봉산동 자율방범대 대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2024 01 12 ()

강원도민일보

강원도민 100명 중 24명 노인...춘천도 초고령화

고령화 비율 지난해 말 23.99%

전체 인구 감소, 65세 이상 증가

형성군 노인인구 34.59%로 최고

도내 원주 제외 17곳 초고령사회

강원특별자치도에 사는 인구 100명 중 24명은 노인으로 집계됐다.

춘천은 2023년 처음 초고령화(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지역) 도시로 들어오면서 도내에서는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초고령화 도시에 포함됐다.

11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의 고령화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3.99%로 집계됐다. 전국 광역 시·도별로는 전남(26.10%), 경북(24.68%)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강원은 이미 지난 2020년 고령인구 비율이 20.72%로 집계돼 초고령사회로 들어온 이후 2021년 21.65%, 2022년 22.77%로 계속 높아져왔다.

강원 전체 인구가 보면 지난해 153만 6498명에서 올해 152만 7807명으로 8691명이 줄어 들었다. 반면 65세 이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별
65세 이상 인구·고령화 비율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자체	65세 이상 인구	고령화 비율
강원도	366,555명	23.99%
춘천시	58,611명	20.46%
원주시	64,487명	17.93%
강릉시	51,700명	24.68%
동해시	20,861명	23.53%
태백시	11,300명	29.19%
속초시	18,496명	22.54%
삼척시	18,014명	28.75%
홍천군	21,287명	31.62%
횡성군	16,038명	34.59%
영월군	12,705명	34.03%
평창군	13,501명	33.20%
정선군	11,250명	32.89%
철원군	11,093명	26.76%
화천군	6,136명	26.67%
양구군	5,278명	25.06%
인제군	7,627명	23.81%
고성군	8,773명	32.12%
양양군	9,398명	33.91%

에서 지난해 20.46%로 상승,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20%)'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도내에서 원주가 유일해졌다. 원주 역시 노인인구 비율이 17.93%로 지난해 16.83%보다 높아졌다.

고령화가 심각한 도내 기초 지자체는 횡성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34.59%를 기록했다. 이어 영월(34.03%)과 양양(33.91%), 평창(33.20%), 정선(32.89%), 고성(32.12%), 홍천(31.62%) 등 7곳의 노인 인구 비율이 30%를 훌쩍 넘었다.

반면 고성군의 지난해 인구는 2만 7305명으로 전년(2만 7274명)보다 31명 늘었다. 이는 간성읍에 마련된 군 인가족아파트 '올곡타운'의 전입인구 때문이다. 김여진

상은 34만 9874명에서 36만 6555명으로 1만 6681명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심화됐다.

시·군별로는 춘천이 2022년 19.46%

강원도민일보

'고무줄 청년나이' 정책별로 수혜 대상 들쭉날쭉

지자체별 고령화 대응 상향 추세

도 18~39세→18~45세 기준 개정

청년 기본·지원 조례 연령 상이

수혜자 정책 이해·홍보 저해 우려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나이를 자체 상향하고 있다. 도내 시·군은 청년의 연령을 각기 다르게 보고, 청년 정책을 추진해 혼선이 예상된다.

11일 분지 취재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시·군은 청년기본(지원)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자체 규정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 나이를 18~34세로 정해, 지자체별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강원도는 청년의 나이를 기존 18~39세에서 45세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청년기본 조례'를 지난 27일 개정했다. 도 관계자는 "지

각 시·군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춘천	19세 이상 39세 이하	속초	18세 이상 39세 이하
원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삼척	18세 이상 39세 이하
강릉	19세 이상 39세 이하	홍천	18세 이상 39세 이하
동해	18세 이상 39세 이하	횡성	18세 이상 39세 이하
태백	18세 이상 49세 이하	영월	18세 이상 39세 이하
평창	18세 이상 49세 이하	화천	19세 이상 39세 이하
정선	18세 이상 45세 이하	양구	18세 이상 39세 이하
철원	18세 이상 39세 이하	인제	19세 이상 39세 이하
/영월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청년기본조례 없음		고성	19세 이상 39세 이하
		양양	18세 이상 49세 이하

역 소멸과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화돼 도내 청년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며 "청년의 범위를 상향해 지원을 확대하고 40대의 정책 소외 현상을 개선하고자 해당 조례를 개정했다"고 했다.

도내 지자체는 △19~39세(춘천시·강릉시·화천군·인제군·고성군)

△18~39세(원주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철원군·양구군·양양군) △18~45세(정선군) △18~49세(태백시·평창군) 등 청년 연령을 달리 구분한다.

문제는 정책의 혼선이다. 청년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나뉘

다. 사업 주체별 청년 정책 대상 연령은 각각 달라 정책 수혜자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연령 확대 첫 해를 맞은 강원도는 자체 청년 정책의 대상 연령 상향을 검토하거나 상향 절차를 밟고 있다. 도지사 공약 사업인 청년 디딤돌 2배 적극

은 올해 대상 연령대를 기존 18~39세로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대상 연령을 높이기 위해 해선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돼 내년부터 45세로 상향한다"고 했다.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은 대상 연령을 올해부터 45세로 올린다. 청년 취업 준비 쿠폰 사업은 정부와 연령 상향을 협의하고 있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강원도 청년 정책 대다수는 만 18~39세로 제한한다. 강원도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해 청년을 활성화 조성 사업 등의 대상 연령은 도 조례 기준 청년 연령(18~45세)과 다르다.

홍원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정책은 명확한 근거에 기초해 설계하고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기준이 청년 정책 대상 연령을 들쭉날쭉 정하면 대중들의 혼란을 야기해 수혜자의 정책 이해와 홍보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 01 12 ()

04

‘수산물 생산량’ 동해 줄고 서해 늘어...지역 격차 심화

강원·경북 위판량 전년비 10%↓

전남 1조원 실적, 전국 절반 차지

동해 오징어·도루묵 어획 급감

고성 도루묵 종자 10만마리 방류

지난해 동해의 수산물 생산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서해는 늘어 지역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수협중앙회가 전국 수협 산지

위판장 214곳의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강원·경북지역의 위판량은 10만3281t으로 2022년(11만4086t)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판금액도 930억원 감소한 4741억원을 기록했다. 강원·경북에 있는 수협 17곳 중 14곳에서 위판금액이 줄었다.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포털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어업생산통계를 보면 2019년 5만3192t, 2020년 4만5351t, 2021년 5만647t, 2022년 5만

8371t, 지난해(1~11월) 4만482t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동해 오징어의 어획량이 전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 이어 대표 어종인 도루묵도 절반 이상 감소된 것으로 집계, 동해 자원급감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강원특별자치도내 수협 회원조합의 위판량을 조사한 결과 2023년(1~11월) 도루묵 누적 위판량은 23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4t보다 60%가량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4년 전

1517t에 비해 84% 줄어든 수치로, 매년 위판량이 줄어들고 있다.

극심한 어획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오징어 채낚기 업종뿐만 아니라, 동해어업 전반에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생산량 감소로 평균 위판가격은 4배 가까이 뛰었다. 같은기간 도루묵 평균 위판가격은 1kg당 9177원으로 2019년(2951원보다) 3배이상(211%·6226원) 증가했다.

반면 서해에 인접한 경인·충남·전북의 위판량은 6188t 증가한 15만

4368t으로 위판금액도 409억원 늘었다. 시도별로는 지난해 56만1283t을 위판한 전남은 전국 수산물 위판량(110만5846t)의 절반을 차지했고, 위판금액도 전국 4조6767억원의 약 40%인 1조7892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박성오 고성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어류팀장은 “도루묵 어미를 이용해 인공 종자 생산을 추진 중”이라며 “4월까지 10만마리 정도의 도루묵 인공 종자를 생산해 방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효석·지산

강원도민일보

2024 01 12 ()

05

도내 거점병원 전문의 줄이탈...“상시채용 불구 총원 난항”

강원대병원 교수 4명 사직 의사

소아과 등 전공의 총원도 어려워

“아이 갈 병원 없다”의료공백 우려

속보=최근 강원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이 한꺼번에 사직 의사를 밝힌 (본지 1월 11일자 4면) 가운데 강원대병원의 다른 과와 도내 다른 병원에서도 의사 이탈은 계속되고 있어 새해부터 의료진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강원대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교수 4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 이외에도 응급의학과와 심장내과에도 결원이 발생해 각각 3명과 1명의 전문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공의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데다 그로 인한 업무 부담이 증가, 사직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원대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응급의학과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인력 총원에 난항을 겪었다.

이 같은 문제는 강원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한 달 가량

의 기간 내에 소아청소년과 2명, 내분비내과 1명, 영상의학과 1명 등의 사직 퇴사가 발생했다. 한림대춘천성심병원에서도 같은 기간 응급의학과 교수 2명이 병원을 떠났다.

병원들 모두 부족한 인력을 총원하기 위해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관계자는 “현재 2월 말 의료진 정년 퇴직까지 예정되어 있어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상시 채용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고,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관계자도 “총원을 위해 모집고를 계속 올리 고 있으며, 남아있는 교수님들이 주변

에 연락을 통해서도 총원하려는 노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 부족은 곧바로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원주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모(34)씨는 “지금도 밤에 아이가 아프면 갈 병원이 없는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같은 대학병원에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계속 퇴사해 의료공백이 심해진다 면 지역에서 아이를 키우기는 너무 어렵 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도내 곳곳에서 이 같은 상황이 매년 반복되자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

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원대병원관계자는 “지방 거점 병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기존처럼 병원에 이득이 되는 것은 별로 없는 정부·기관 투자 사업비 매치 사업 말고 인력난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도내 의료기관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나온 내용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 다”고 밝혔다.

김정호 kimjho@kado.net

2024 01 12 ()

江原日報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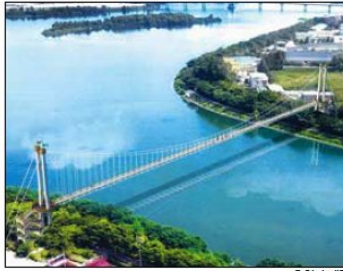
춘천 호수변 일대 관광자원 키운다

연내 의암호 출렁다리 준공
소양호 둘레길 착공도 예정
시 “호수 관광권 연계 홍보”

【춘천】‘호반의 도시’ 춘천이 호수변 일대 관광자원 보강에 박차를 가한다.

춘천시는 올해 의암호 전망 출렁다리 ‘춘천사이로 248’이 준공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방비 52억원이 투입된 의암호 출렁다리는 총길이 248m, 폭 1.5m 현수교로 조성된다.

조성 위치는 공지전 인라인 스케이트장~근화동 유수지 방



춘천시 제공

◇의암호 전망 출렁다리 ‘춘천사이로 248’ 조감도.

면이다. 이와 함께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소양호 둘레길 조성 사업은 올해 설계와 인허가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소양

강댐 정상과 청평시를 잇는 5.9km 길이의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총 72억원이 투입된다.

또 다른 의암호 관광 명소가 될 상종도 호수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지방정원 대상지로 선정되며 순항 중이고, 의암호와 도심을 조망하는 대관람차 조성 사업도 적정 부지 물색을 비롯한 사업성 검토가 지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암호 전망 출렁다리 준공과 맞물려 호수 관광권역에 대한 연계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2024 01 12 ()

江原日報

17

오늘 원주~여주 복선전철 첫 삽

【원주】원주시가 철도교통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12일 오전 10시45분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박상우 국토부장관과 송기현·박정하 국회의원,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 원강수 원주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등이 참석한다.

이 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 구간을 연결

서원주역서 착공식 개최
9천억 투입 2028년 개통
본격 ‘수도권 시대’ 활짝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9,309억원을 투입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돼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본격적 수도권

시대로의 시작을 알린다.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송도), 서울 강남(수서)에서 강릉(강릉선), 부산(중앙선)까지 연결되면서 원주가 중부내륙권 ‘철도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최근 중앙선의 서울역 연장 개통을 비롯해 추후 부산(부산역)으로 확장되고,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완료되면 전남 목포까지 원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여주~원주 복

선전철은 강릉선의 완성으로 주목받는다. 서해안을 대표하는 인천에서 동해안 중심도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동서축이 완성돼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하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할 경우 중앙선과의 연계성을 높여서 원주가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데 적극 힘을 보탬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江原日報

2024 01 12 ()

20

태백시-강원랜드 노인요양시설 부지 계약

웰니스항노화산단 시니어헬스케어센터 원형지 공급
강원랜드, 219억 들어 건립 고용창출·인구유입 기대

【태백】태백시와 강원랜드가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랜드 노인요양시설(시니어헬스케어센터)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와 강원랜드는 11일 오후

태백시청에서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게 될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원형지는 기초 인프라 외 부지 조성 계획 없이 미개발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로 개발자가 원하

는 사업에 맞게 부지를 직접 조성할 수 있다.

강원랜드는 이곳에 219억원을 들여 80병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는 특화단지 내에 입소노인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근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곡동 사배리골 일원에 조성 중인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는 1,156억4,400만원을 들여 천연자원을 활용해 6차산업형 항노화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스포츠빌리지, 힐링빌리지, 항노화공원, 힐링정원, 공원 등이 갖춰진다.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10일 실시계획

이 승인됐다. 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호 시장은 “강원랜드 요양시설이 운영되면 지역경제 발전과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광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 01 12 ()

09

춘천 원도심 ‘지역초교 특성화’로 살린다

시·교육지원청, 공모사업 접수
2개교 선정 사업비 5억원 투입
학생 유입 통한 인구감소 대응

춘천시와 교육당국이 인구유출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의 회복을 위해 해당 지역 내 초등학교 특성화를 추진한다.

11일 본지 취재결과 최근 춘천교육지원청은 원도심에 위치한 일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공고를 냈다. 사업 대상은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13학급 이하 초등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감소 중인 5개 초등학교다.

춘천시와 교육당국은 별도로 학교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본지가 파악한 5개 학교는 교동초(7학급), 동춘천초(13학급), 봉의초(13학급), 호반초(13학급), 효제초(9학급)다.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오는 25일까지 학교로부터 신청을 접수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선정 결과는 이르면 이번 달 내로 정해지고, 한 달간의 컨설팅을 거쳐 올해 3월 신학기부터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되며,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춘천시와 춘천교육지원청은 원도심 지역 학교가 살아나면 원도심 지역도 함께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춘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난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각 학교가 자신들이 운영할 모델을 마련해 신청하면 위원회를 통해 2곳을 선정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선정 이후에는 학교의 계획에 맞는 컨설팅단을 구성해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학교 살리기’에 나서자 현장의 기대감도 상당하다. 각 학교는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돌입하는 한편, 자신들이 제안할 ‘모델’ 발굴에 들어갔다. 사업 참가 의사를 밝힌 A초 교장은 “교육지원청 공문을 받은 후 내부

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우리는 도전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학생이 줄고 있는 반면 지역 내에는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학교도 있다. 우리가 일부 학생을 흡수한다면 적정 규모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 10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은 “원도심 학교를 최고의 학교로 만들어 오히려 학교 때문에 원도심을 떠나지 않게 하자는 역발상을 하고 있다”면서 “학부모와 학생이 만족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원도심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정민엽 jmy409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1 12 ()

10

“100억원 효과 ‘원주만두축제’ 브랜드화 필요”

시, 2023 축제 평가용역 보고회
20만명 유입 경제파급효과 톡톡
주차장·접근성 등 개선책 논의
지속가능 발전 글로벌 전략 모색



2023 원주 만두축제 평가용역 보고회가 11일 원주시청에서 열려 성과와 개선책 등을 제시했다.

원주만두축제가 약 100억원의 높은 경제 파급효과를 거뒀으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주차장 확충 등 접근성 개선, 원주만두 브랜드화 등의 보다 체계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원주시는 11일 시청에서 원강수 시장, 조용석 시의원, 백귀현 원주만두축제 추진위원장, 이재형 상지대 교수, 이민선 시 새마을회장, 상인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원주 만두축

제 평가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를 통해 지난 2023년 10월 28, 29일 이틀간 열린 이번 축제는 약 20만명이 유입되고 100억여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거뒀다. 또 방문객 약 20만명의 51.2%인 10만3200여명이

외지인으로 분석되는 등 성공적 축제로 진단됐다.

반면 주차장 부족 및 먼 동선 등 접근성 개선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혔다. 특히 축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글로벌화 전략을 가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글로벌 만두창업 쇼케이스, 관광객 유입을 위한 만두네트워크 구축 등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만두골목 조성, 만두창업 지원, 포토존, 굿즈 제작, 캐릭터 개발, 투어 상품 등 축제의 글로벌화와 원도심 활성화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보다 세심한 원주만두 브랜드화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원강수 시장은 “원주하면 만두, 만두하면 원주가 떠오를 정도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세계 다양한 유형의 만두를 원주에서 먹을 수 있는 전략적 마케팅을 강구하고 제1회 축제의 미흡한 부분을 한층 보완해 조속히 세계적인 축제로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강원도민일보

2024 01 12 ()

11

강릉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속도낸다

이달 설계용역, 행정절차 나서
강동면 41ha 총 250억원 투입
숲 연계 치유·단련시설 조성

산림 치유와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국립산림레포츠센터가 강릉지역에 유치된 가운데 올해 실시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본격화된다.

동부산림청과 강릉시에 따르면 지

난해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유치된 국립산림레포츠센터 건립의 가시화를 위해 기본설계에 이어 올해 1월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립산림레포츠센터는 강동면 연별리산 229단경골 일대 시유림과 국유림 등 41ha에 총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조성한다.

산림 등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레포츠센터는 산림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레포츠 시설을

갖춰 관광객들이 친환경 자연에서 힐링 및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레포츠센터에는 산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쉼라인 등 쉼터 시설을 비롯해 산악승마, 암벽등반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춘다.

우수한 경관을 자랑하는 숲에는 치유와 힐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쉼’ 공간을 제공한다.

주변에는 산책코스를 비롯한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등 국내 최고의 산림레포츠단지로 꾸민다.

산림레포츠센터가 조성되면 솔향수목원과 연계돼 ‘머무르는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부산림청 관계자는 “지역의 산림자원을 관광산업으로 바꿔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림 관련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며 “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변 안보등산로, 정동진, 솔향수목원 등과 연계되는 주요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 01 12 ()

/ 19

청소년올림픽 개최지 물가 관리를

-내외국인 붐빌 때 숙박·음식 요금과 위생 문제없도록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올림픽)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3회 대회보다 3개국이 늘어난 79개국에서 1803명의 선수단이 강원을 찾습니다. 오는 19일 저녁강릉오벌에서 열리는 개회식 유료 입장권 판매가 순조로워 매진이 임박해 있으며 2월 1일까지 열리는 각종 경기 관람은 무료로 진행돼 관람객 방문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막바지 준비에 들면서 안전과 위생 상태를 면밀하게 점검 중이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대회본부와 선수촌 등 대회 직접시설 안전과 위생 상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하겠지만, 외국인과 관람객 등이 더 자주 접하는 장소는 다른 민간시설이기에 병행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 참가선수단 1083명 중 국내 10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입니다. 선수들은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등 7개 경기, 15개 종목에 걸쳐 81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발휘하게 되는데 지역주민은 물론 응원단과 관람객 등 방문객이 일시에 늘어날 것입니다. 국립예술단체의 무용, 발레 등 무대를 비롯해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 및 강릉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에 이르기까지 강릉아트센터

에서 열리는 기념공연 입장권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는 물론 전시와 공연 등 문화행사 참여와 관람객 방문이 잇따르게 됩니다.

특히 경기가 불황이고 고물가 시대 터널이 지속되고 있기에 비용에 매우 민감합니다. 개회식 인파가 몰리는 강릉에서 벌써 숙박요금이 높다는 불만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에 더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올림픽 기간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는 등의 수법으로 노골적으로 이익을 챙긴다면 지역에 호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촬영한 부정적인 이용 후기 동영상 등이 그 지역 전체 이미지나 업계 인상을 훼손한 사례를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극소수에서 벌어지는 사안이지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삼시간에 전파되므로 그 여파는 만만치 않습니다. 각종 요금은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식중독환자가 발생한 전례가 있기에 위생 관리는 요금 문제보다 더 우선해 철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 선수단은 세계 각국의 미래세대로 재방문 계기가 되도록 유쾌한 인상을 심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12 ()

/ 19

외국인 고용제도 합리적 개선을

-어촌 현실과 맞지 않아 어업경영인 부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노동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어촌지역에서 고용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계약기간과 조업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고용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구인난과 함께, 노동하지 않는 기간에도 비용이 소요되면서 선주 등 어업인들이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더구나 비공식적인 통로로 취업하는 경우,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대책이 없어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본지 취재 결과 강릉 주문진 지역단기 외국인 노동자 추산 인구 200여명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취업 알선업자를 통해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은 이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어려워 급여도 현금으로만 지급하는 실정이라고 전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상당부분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 기간과 계약 기간이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비숙련 비자는 4년 10개월, 선원 비자의 경우 3년을 계약하지만 어업 특성상 1년 중 핵

심 조업 기간은 3~4개월 정도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바쁜 시기가 지나면 나머지 7~8개월은 선주가 숙식비를 떠안아야 합니다. 월세방값과 식사비, 보험비 등 인건비 외에도 1명당 80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력 신청을 해서 거주지까지 마련했는데 업무가 불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아, 선주들이 경비만 허비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약기간 내 다른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 불법 취업알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현행 외국인 고용 시스템은 계약한 기간 안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면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도내 농어촌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움 없이 생산과 조업을 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들의 노동을 통해 1차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요구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현지 고용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江原日報

2024 01 12 ()

/ 25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경제에 활기 불어넣기를

정부가 신축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전국에서 95만채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2027년까지 준공 30년을 경과하는 도내 주택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1,073개 단지 13만6,218가구다. 춘천이 129개 단지 2만4,820가구, 원주 141개 단지 3만4,439가구, 강릉 170개 단지 2만1,800가구, 동해 76개 단지 1만1,248가구, 속초 71개 단지 1만3,204가구 등이

다. 또 정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면 주택 건설사업자 원시취득세를 최

대 50%까지 감면한다. 대상은 올해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으로 12월까지 임대계약(2년 이상)을 체결한 주택이다. 도내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란 논란도 뜨겁다. 정부의 ‘1·10 공급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던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로 미뤄져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된다. 재개발 추진의 기준인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도 완화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개발·재건축 억제 정책 탓에 집값이

폭등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필요한 시책이다. 특히 불량 노후 단독 주택 밀집 지역 재개발은 시급하다. 부동산 불황이 극심한 지금이 규제 완화의 타이밍일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이 ‘영끌·빚투’ 등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다시 아파트 시장을 흔들 수 있다. 비싼 집값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향후 과잉 공급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국회의 협조도 관건이다. 안전진단 시점을 늦추고 조

합 설립 시기를 앞당기는 등 재건축 절차를 조정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며 규제 완화는 집값을

30년 지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도내 2027년까지 13만6,218가구 해당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정부 후속 조치 중요

떨올 것이고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는 조세 정의를 해친다고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필수다.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순차적인 공급 전략을 준비하고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따른 난개발에도 대비해야 한다. 선거용이 아닌 전체 시장의 안정을 고려한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 돼야 한다. 재개발의 경우 건축업자만 배를 불린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해 입법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살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1·10 공급 대책’이 집값 불안을 키우는 정책이 아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江原日報

2024 01 12 ()

/ 25

연간 출생아 100명 미만 5곳, 지역 소멸 전조인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100명 이 채 되지 않은 시·군이 5곳에 달했다는 소식이 우리를 절망하게 한다.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유난히 빠르다.

본보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연간 출생아 수 100명 미만인 강원자치도 내 지자체는 태백, 평창, 정선, 고성, 양양 등 5개 시·군으로 집계됐다. 경북·경남(각 7곳)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충북과 전남도 각각 3곳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양양의 출생아 수는 78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었다. 이어 고성 86명, 평창 92명, 정선·태백 각 93명 등이었다. 태백의 경우 전국 시(市) 지역 중 유일하게 100명을 넘기지 못했다. 태백은 2021년 131명, 2022년 129명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감소세다. 도내에서는 2017년 양양군이 처음으로 출생아 수 100명 미만을 기록했고 이후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2곳, 2021년 3곳, 2022년 4곳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정부가 2006년부터 16년간 280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육아, 주택, 교육, 양성 평등 등 다방면의 종합적인 방안과 함께 저출산 및 인구 감소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 출산율의 획기적 반전이 없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급진적인 사고가 간절한 시점이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워 준다는 정도의 통 큰 정책이 필요하다. 또 청년층의 고용 불안을 자극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잔혹한 입시 경쟁, 비싼 주택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며 수도권 집중 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부모와 법률혼 중심의 정상 가정을 전제로 한 지원 체계를 넘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 중심의 지원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하루빨리 지속 가능한 구조개혁에 나서는 동시에 혼외자 같은 고루한 인식을 바꿔야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출산율이 0.2만 올라도 2040년 잠재 성장률은 0.1%포인트 높아진다고 한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기업, 정부, 군대, 경찰, 복지, 의료, 간병 등 사회 각 부분의 필수인력이 부족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소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어두운 미래는 다름 아닌 청년세대의 몫이다.